

수원시민의 생활비 부담 실태와 대응과제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슬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요 약

■ 생활비 부담은 소비의 문제를 넘어 「체감 불평등」과 「관계 축소」로 확산

-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되더라도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으면 체감 불평등은 악화될 수 있으며, 청년층에서는 만남·모임 비용 부담으로 사회적 관계 자체가 축소

■ 생활비는 소득의 절반 이상 차지, 저소득·청년·1인가구·자영업자에 집중

- 수원시민은 월평균 소득의 56.9%가 생활비로 지출
-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 특히 청년층과 전·월세 임차가구뿐 아니라 1인가구·자영업자에서도 높은 생활비 부담 확인

시 사 점

■ 교통·교육·의료에서 식생활비·주거비까지 생활비 절감 정책의 범위 확대

- 기존 3대 생활비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부담과 정책수요가 가장 큰 식생활비·주거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 확대 추진

■ 획일적 지원에서 ‘생애주기+생활비 취약집단’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

- 청년·중년·장년·노년의 생애주기별 부담에 대응하면서, 1인가구·자영업자 등 가구형태와 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취약집단을 별도 지원하는 이원화된 정책 설계 필요

■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얼마나 절감됐는가’로 성과관리 전환

- 정책 인지도나 수혜자 수뿐 아니라 시민이 실제 생활비를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필요

1. 생활비 절감 정책, 왜 중요한가?

□ 객관적 소득 분배 개선에도 과도한 생활비 부담과 자산 불평등으로 인한 체감 불평등 심화¹⁾

- 지난 7년간 공적이전소득 확대 등으로 소득 불평등 지표는 완화되었으나, 높은 생활비 부담과 자산 격차로 인해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
 - 지표와 체감 사이의 괴리 : 7년간 국민연금·실업급여 등 공적이전소득이 확대되어 지니계수(0.353→0.323)는 완화되었으나, 주관적 불평등도(5.53점→6.21점)는 오히려 상승
 - 생활비 부담 : 소득 수준이 개선되어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은 소득이 크지 않아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인식
 -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소득 수준 자체보다 생활비 감당 여력이 자산 불평등 인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
 - 자산 격차 : 금융 자산이 적거나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체감

□ 프렌드플레이션(Friendflation)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닌 주요국 청년층의 공통 과제²⁾

- 생활비 부담이 가계부를 넘어 '관계'까지 잠식,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는 고물가가 교제비용 축소로 연결
 - (한국) 외식·카페·여가비 상승이 사람을 만나는 비용까지 끌어올리면서 만남 자체를 줄이는 「프렌드플레이션」 확산
 - Z세대 조사에서 93.0%가 물가 상승으로 친구와의 만남·모임 비용에 부담을 느꼈으며, 71.2%는 관련 지출을 줄였다고 응답. 특히 지출을 줄인 응답자의 83.9%는 만남·모임 횟수 자체를 줄인 것으로 나타나, 생활비 부담이 소비를 넘어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
 -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교제 관련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14.7% 감소하며 10개월 연속 하락세, 34세 이하 1인 근로자 가구의 소득 대비 교제 비율도 2019년 2.2%에서 2025년 1.3%로 하락
 - (미국) 미국 얼라이 은행(Ally Bank)의 Z세대·밀레니얼 1,000명 조사에서도 44%가 비용 부담으로 주요 사교 모임을 건너뛴 경험 있고, 42%는 연중 몇 달간 모임비를 초과 지출한다고 응답
- 임금 정체와 물가 상승이 겹칠 때 교제·여가 등 선택적 지출이 가장 먼저 삭감 현상 발생
 - 이러한 변화가 장기화 될 경우 청년층의 사회적 관계 축소와 정주 만족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저비용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공공공간·문화 프로그램 등 생활SOC 기반을 확충할 필요

□ 생활비 절감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과 수원시의 정책 방향

- 최근 지방정부의 생활비 정책은 일회성 현금지원보다는 교통비·주거비·교육비·의료비 등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정·필수지출을 낮춰 시민이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체감하는 방향으로 확대
 -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천원 임대료, 천원 아침밥, 천원 복비 등)', 화성시 '무상대중교통', 안산시 '등록금 반값 지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충청남도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 부산시 '청년 임대료 지원', 대전시 '청년 월세 지원' 등

1) '소득 불평등' 완화돼도...생활비 부담 안 줄면 "더 불평등" 느낀다(한겨레, 2026.03.19.)

2) 외식비 올라 친구도 안 만난다... 2030 댁친 '프렌드플레이션'(2026.08.18.)

- 수원시는 '생활비절감추진단' 신설을 계기로 개별 지원사업에서 통합적인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수원시는 2026년 10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 직속 '생활비절감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비·의료비·교통비 등 생활비 절감 정책을 전담하는 추진체계를 마련³⁾
 - 생활비절감추진단 신설은 생활비 절감이 개별 복지사업의 집합을 넘어 시민의 가계지출을 줄이는 시정의 상시 추진과제로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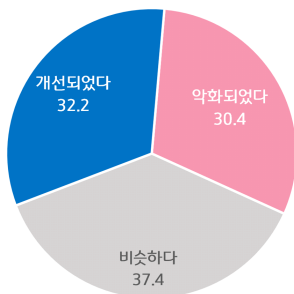
2. 수원시민이 마주한 가계경제 현실

□ 수원시민의 소득은 정체, 지출은 증가...체감 가계부담 확대

- 시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 압박은 소득 증가세 둔화 속에서도 필수 지출이 늘어난 데서 비롯된 '가계 수지비대창상'에 기인
 - 2026년 상반기(1~6월) 가계경제를 1년 전(2025년 상반기)과 비교했을 때, 수원 시민들은 전년과 '비슷하다'(37.4%)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함
 - 지난 1년간 소득·지출 변화를 보면 소득은 '변화 없음'이 45.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소비지출은 '증가했다'가 58.7%로 과반을 차지함

<2026년 상반기 가계경제 체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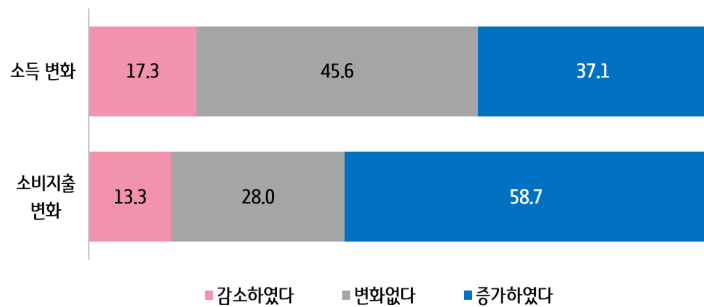
(단위: %)



질문: 2026년 상반기(1~6월) 귀하의 가계경제 전반(전체적인 살림살이)은 2025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소득 및 소비 지출 변화>

(단위: %)



질문: 지난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하의 소득 및 소비 지출 변화는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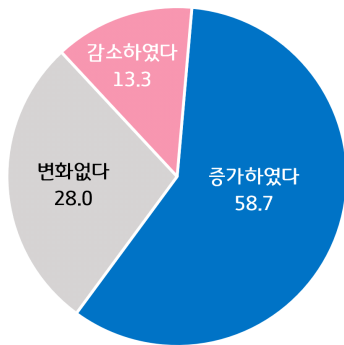
● 소비지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물가상승과 소득감소

- 소비지출이 감소한 원인으로 물가 상승(44.9%), 소득감소(30.4%)를 꼽아, 물가상승과 소득감소가 동시에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함

3) 수원시, 생활비절감추진단·시민소통국 신설 등 조직 개편(뉴시스, 2026.09.01.)

<소비지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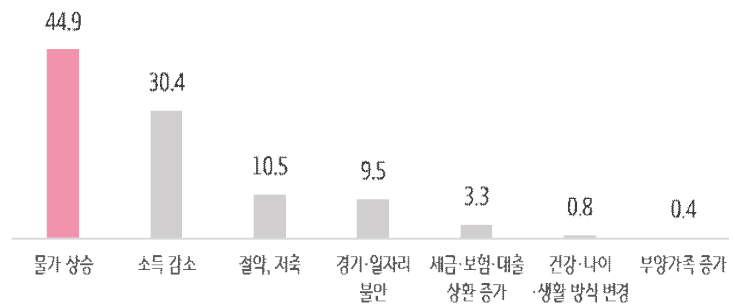
(단위: %)



질문: 지난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하의 소득 및 소비 지출 변화는 어떻게 변했다고 느끼십니까?

<소비지출 감소 이유(1순위)>

(단위: %)



주: 기타 제외

질문: 지난 1년 전과 비교할 때, 귀하의 소비지출이 감소(혹은 증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이 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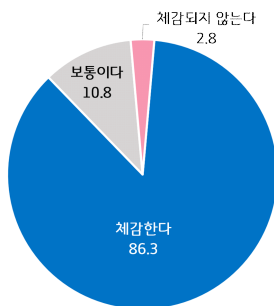
□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부담, 시민 전반의 문제

● 수원시민 10명 중 8~9명(86.3%)은 '3고 현상을 체감한다'고 응답

- 경제활동 핵심 세대인 중년층(88.1%)과 장년층(87.7%)에서 체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고 체감도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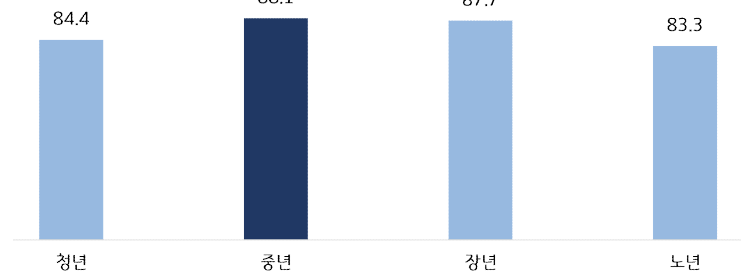


질문: 귀하는 최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계십니까?

주: 청년 19~34세, 중년 35~49세, 장년 50~64세, 노년 65세 이상

<세대별 3고 체감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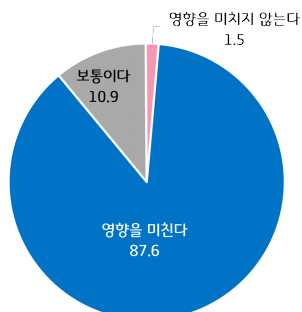


- 3고, 생활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

- 3고가 생활비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87.6%에 달했고, 특히 은퇴 전후 자산관리 부담이 큰 장년층(91.6%)에서 영향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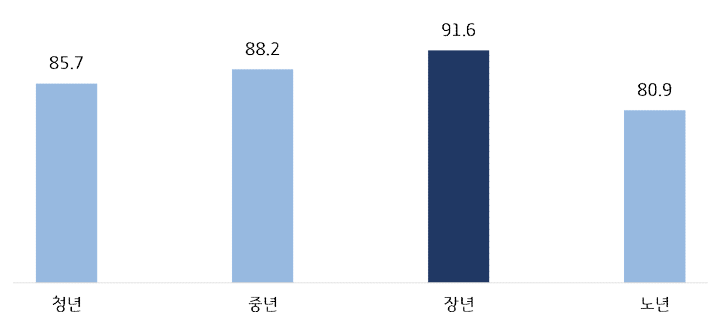
< 3고가 생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

(단위: %)



<세대별 생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질문: 최근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귀하의 생활비 부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청년, 가장 낮은 소득 속 필수생활비 부담 지속

● 청년의 생활비 규모는 가장 작지만, 소득 대비 부담은 오히려 크게 나타남

- 월평균 생활비는 장년이 343.6만 원으로 가장 높고, 청년은 125.9만 원으로 4개 집단 중 가장 낮음. 그러나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50.9%)을 역산하면 청년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7.3만 원 수준으로, 장년(567.9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소득 격차(장년 대비 약 2.3배)보다 생활비 격차(장년 대비 약 2.7배)가 더 크게 벌어지는 구조로, 이는 생활비가 소득 수준에 비례해 축소되지 않는 '최소 지출 하한선' 성격을 지니기 때문으로 해석됨. 즉 청년층은 소득이 낮아도 주거·식비·통신 등 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출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청년층은 제한된 소득 내에서 생활 유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축·투자 등 자산 형성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여력이 극히 제한적인 구조에 놓여 있음을 시사

<생활비와 월평균 소득(추정치)>

(단위: 만 원, %, 만 원)

구분	월평균 생활비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	월평균 소득 추정치
전체	266.6	56.9	468.5
청년	125.9	50.9	247.3
중년	316.5	58.0	545.7
장년	343.6	60.5	567.9
노년	246.9	57.3	430.9

주: 월평균 소득 추정치는 [월평균 생활비 ÷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 × 100]으로 계산함

질문: (월평균 생활비) 귀하의 월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 귀하의 월평균 소득 중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 체감부담과 실제 지출 일치...핵심은 '식생활비'와 '주거비'

● 필수 생활 영역(식생활비, 주거비)이 가계 생활 압박

- 가계지출 중 실제로 지출 비중이 큰 항목으로 식생활비(30.7%)와 주거비(18.9%)가 가장 큰 몫을 차지해, '부담 인식'과 '지출구조'가 같은 방향
- 경제적 부담이 큰 항목도 식생활비(44.0%)와 주거비(24.5%)를 꼽아, 지출 비중에 따라 부담 역시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계부담 지출 항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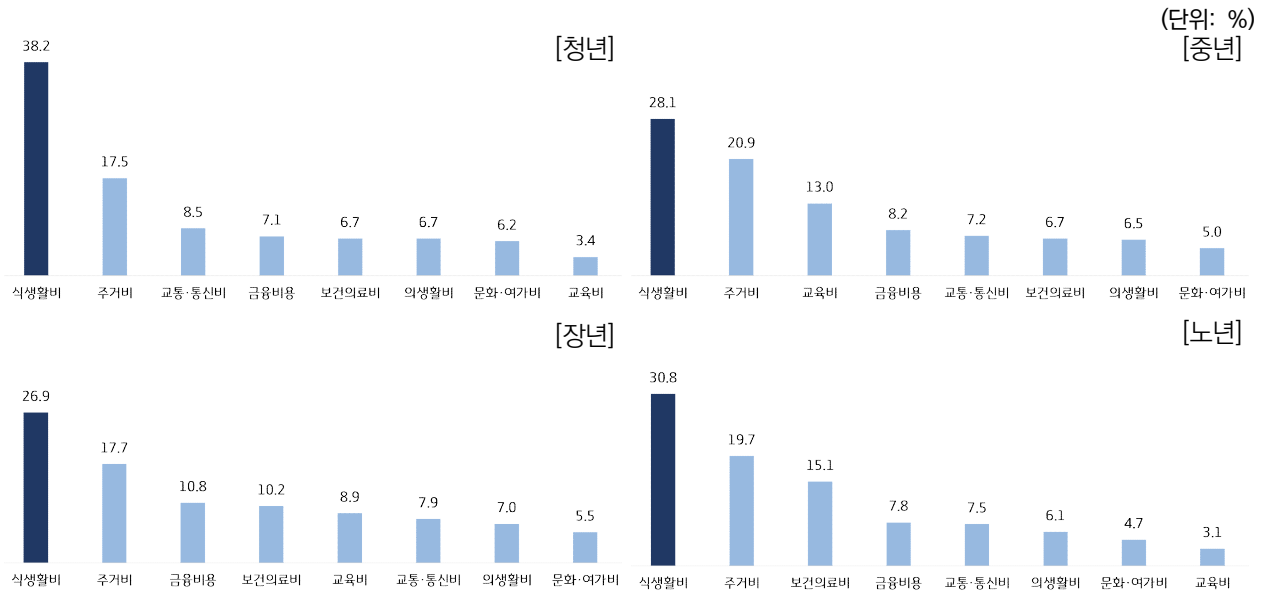
구분	실제 지출 비중	경제적 부담이 큰 지출 항목
식생활비 (식료품, 음료, 외식, 배달 음식 등)	30.7	44.0
주거비 (전·월세, 주택 대출 원리금, 아파트 관리비 등)	18.9	24.5
교육비 (자녀 학원비·등록금, 유치원·보육비 등)	7.8	9.9
보건의료비 (병원·치과 진료, 약값, 건강검진, 한방 치료 등)	9.0	8.7
금융비용 (주거를 제외한 대출 원리금·이자, 신용카드 결제액, 할부금 등)	8.7	4.4
의생활비 (의류·신발, 미용·헤어·피부 관리 등)	6.6	3.0
교통·통신비 (자동차 구입·유지비, 대중교통, 택시, 인터넷, 휴대폰 등)	7.8	2.9
문화·여가비 (여행, 취미 활동, 운동 시설 이용, 도서·게임·공연 관람 등)	5.4	1.8

주: 부담 항목은 1순위 응답 기준(기타 제외)

● 필수 생계비(식·주) 부담 속 세대별 3대 지출 품목의 격차 뚜렷

- 청년: 식생활과 주거비(합산 55.7%) 다음으로 활동량이 반영된 교통·통신비(8.5%)가 3대 지출 항목
- 중년: 전 세대 중 주거비(20.9%)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교육비(13.0%) 또한 상대적으로 높음
- 장년: 전 세대 중 식생활비(26.9%) 비중은 가장 낮지만, 은퇴 전후 자산 관리 및 부채 상환 여파로 금융비용(10.8%)이 전체 소비의 10% 이상을 차지
- 노년: 식생활·주거비(합산 50.5%) 부담과 더불어, 노화로 인한 보건의료비(15.1%) 비중이 타 세대 대비 최대 2배 이상 높음

<세대별 가계 소비 지출 항목>



질문: 귀하의 월평균 전체 소비지출을 100이라고 할 때, 다음 항목별 지출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교통·교육·의료 3대 생활비, 가계지출의 1/4...세대별 부담 구조 뚜렷

● 3대 생활비 기준 수원시민 1인당 연평균 생활비는 360만 원으로 전국 평균 420만 원⁴⁾과 60만 원 차이

- 전국 대비 수원시는 교통통신비가 81만 원 낮고, 교육과 보건의료는 각각 16만 원, 5만 원 높음
 - 전국 기준 1인당 연평균 420만 원 : 교통·통신 196만 원, 교육 99만 원, 보건의료 125만 원
 - 수원시 기준 1인당 연평균 360만 원 : 교통·통신 115만 원, 교육 115만 원, 의료 130만 원

● 교통·통신(7.8%), 교육(7.8%), 보건의료(9.0%)를 합한 3대 생활비는 가계지출의 24.6%로, 식생활비(30.7%)에 버금가는 규모

- 3대 생활비는 생애주기에 따라 비중의 축이 이동: 청년은 교통·통신(8.5%), 중년은 교육비(13.0%), 노년은 보건의료비(15.1%)가 상대적으로 높음
- 3대 생활비 개별 항목의 부담 순위는 식·주보다 낮지만, 세대를 합산하면 가계지출의 1/4을 차지함. 또한 급식·교통·보육·의료처럼 지방정부가 현물·서비스로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4)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2025년 말 기준,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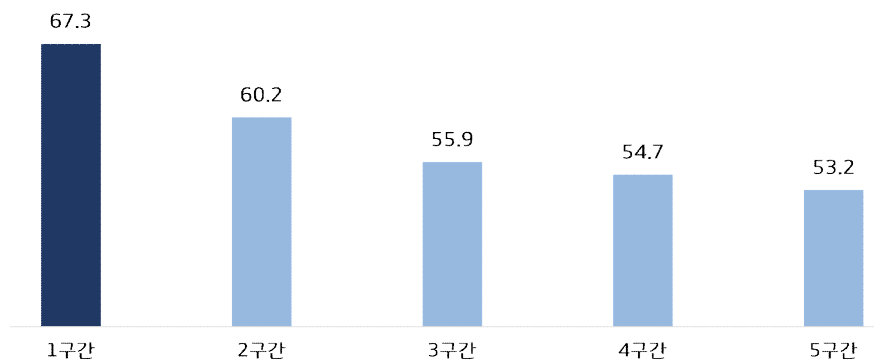
3. 부담의 양극화: 저소득층, 청년층, 1인가구, 자영업자에 집중

□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하는 생활비 부담

- 월평균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 평균 56.9%, 평균적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로 지출되는 구조
 - 월평균 소득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뚜렷하게 높아짐
 - 최저 소득구간(소득 없음)에서는 평균 67.3%에 이르는 반면, 최고 소득구간에서는 53.2%로 낮아짐

<소득구간별 소득대비 생활비 부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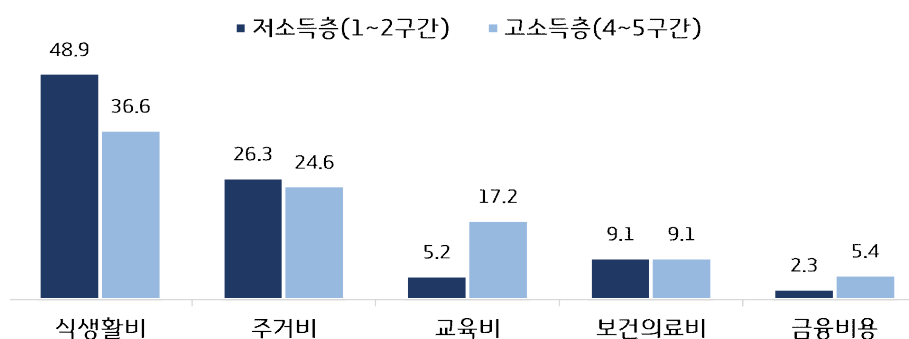
주: 1구간: 소득 없음 / 2구간: 100~200만 원 미만 / 3구간: 2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 4구간: 4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 5구간: 700만 원 이상

●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 항목에도 차이 발생

- 저소득층은 식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48.9%로 가장 높고 주거비(26.3%), 보건의료비(9.1%) 순
- 고소득층 또한 식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36.6%로 가장 높으나, 교육비(17.2%)와 금융비용(5.4%)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큼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1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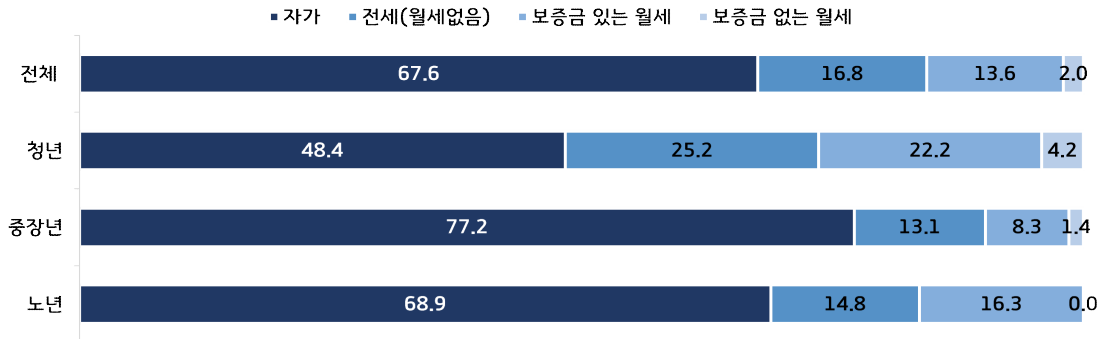


● 청년, 월세 중심 임차 구조로 주거비 부담 특히 심각

- 청년층은 자가 비율(48.4%)이 낮고, 전세·월세 등 임차 비중이 다른 세대보다 높아 주거 안정성이 취약
- 특히 보증금 있는 월세와 보증금 없는 월세 비중이 높아 매달 현금 지출 부담이 크게 나타남

< 주거형태 >

(단위: %)



질문: 현재 귀하의 주거 형태는 무엇입니까?

□ 1인가구, 자영업자의 고정비 위기

● 1인가구·자영업자, 이중고 - 식비와 생활비 부담 가중

- 1인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161.2만 원으로 다인가구(282.9만 원)보다 절대 규모는 작지만,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은 57.4%로 다인가구(56.8%)보다 높음. 특히 경제적 부담 1순위 항목으로 식생활비를 꼽은 비율이 55.9%로 다인가구(42.2%)를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1인가구가 다인가구 보다 배달·테이크아웃 등 외식성 소비 비중이 높고, 소포장·편의식 중심의 구매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⁵⁾
-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의 월평균 생활비는 333.8만 원으로 전체 평균(266.6만 원)을 크게 상회하며,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은 62.2%로 전 직업군 중 가장 높음. 부담 항목에서도 식생활비(33.6%)와 주거비(33.1%)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영업자 가구가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와 달리 사업장 운영과 주거가 결합된 형태가 많고 그 결과 생활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월평균 생활비 및 가계부담 지출 항목>

(단위: 만 원, %, %)

구분	월평균 생활비	소득대비 생활비 비율	1순위 부담 항목
1인가구	161.2	57.4	식생활비(55.9%)
다인가구	282.9	56.8	식생활비(42.2%)
자영업자/소상공인	333.8	62.2	식생활비(33.6%)·주거비(33.1%)
직장인	254.9	53.3	식생활비(41.7%)·주거비(24.5%)

□ 시민이 요구하는 대응, '식생활비·주거비' 부담 완화

● 생활비 완화 정책 수요, 식비와 주거비에 집중

-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원시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대책으로 시민들은 식생활비 부담 완화(42.3%)와 주거비 부담 완화(19.8%)를 꼽음. 이는 앞서 확인한 '가장 부담이 큰 항목'과 정확히 일치. 시민의 부담 인식과 정책 요구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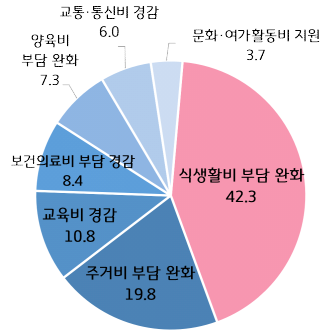
5) 김지훈·임성수. (2021).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배달·테이크아웃 식품소비행태 비교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11(11), 327-334.

● 세대별 맞춤 생활비 정책 설계 필요

- 식생활비 완화는 모든 세대에서 1순위지만, 그 다음 순위는 세대별 차이를 보임
- 청년은 주거비(24.2%)와 양육비(11.6%), 중년은 교육비(19.6%), 노년은 보건의료비(20.1%) 부담 완화를 상대적으로 강하게 요구함. 생애주기별로 부담의 무게중심이 다르다는 점은, 생활비 절감 정책이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세대 맞춤형 설계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줌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 안정 정책>

(단위: %)



구분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식생활비 부담 완화	41.6	37.6	43.5	50.0
주거비 부담 완화	24.2	19.4	18.9	14.9
교육비 부담 완화	6.5	19.6	8.7	6.1
보건의료비 부담 완화	2.7	3.8	11.7	20.1
양육비 부담 완화	11.6	11.5	3.4	0.0
교통·통신비 부담 완화	7.7	4.6	6.5	4.4
문화·여가활동비 지원	4.3	1.2	5.7	2.8

주: 기타제외

질문: 다음 중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민생 안정 대책은 무엇입니까?

● 시민들은 수원페이와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를 '내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 정책'으로 인식

- 수원페이는 인센티브 할인율 상향, 충전한도 확대 등으로 가계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 소비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민생·지역경제 정책으로 인식
- 대중교통 접근성 제고는 출퇴근·등하교·병원 이용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로, 시민들은 이동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을 삶의 질 향상의 필수 요인으로 인식

<시민이 원하는 정책>

(단위: 명)

순위	추가 희망 정책	사례수	순위	추가 희망 정책	사례수
1	수원페이 인센티브/충전한도/사용처/예산확대	126	9	쓰레기·악취·매연, 소음 등 환경오염 관리	28
2	기본소득/생활비 부담 완화 등 물가 경감을 위한 지원	69	10	도로·인도, 교각 정비 및 관리	28
3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노선/배차·효율적 운영)	48	11	노인 복지/지원 강화	24
4	양질의 일자리·취업 지원 확대	38	12	공원·녹지·휴식공간 관리/확대	23
5	출산·육아·돌봄 지원 확대	36	13	청년·청소년 지원	22
6	교통 체계 및 인프라 확충/관리	35	14	교육 프로그램/공간/비용 지원	22
7	정책 추진 속도·실행력 강화	32	15	문화·관광 정책의 지속성·체계성 개선	21
8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거지원/공공임대 확대	32	16	하천·수변도시 조성 및 주변 환경 개선	20

질문: 민선 9기에서 추진 예정인 3대 정책과 7대 생활공약 외에, 귀하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자유롭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0명 이상이 언급한 사례를 순위별로 제시

4. 생활비 부담 정책, 왜 지방정부의 과제인가?

□ 법·제도적 근거: 주민의 복리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

- 「지방자치법」상 주민 복지증진은 자치사무로 명시되어 있고, 생활비를 좌우하는 급식·보육·교통·지역화폐 등의 설계 권한도 이미 지방정부에 있음⁶⁾
 -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2항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음. 헌법 제117조 제1항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 완화는 시혜적 사업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기본 책무 범위에 놓인 과제임
- 개별 법령상 근거: 생활비 수단의 설계권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음
 - 실제로 급식·보육·대중교통·공공요금·지역화폐 등 시민의 생활비를 직접 좌우하는 수단의 상당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설계·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영역

국내외 생활비 정책 사례		
지역/정부	정책수단	생활비 절감방식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정액권으로 반복적인 이동비 부담 완화
경기도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역내 사용을 전제로 소비 여력 보완
싱가포르	CDC Vouchers	전통시장·동네상점·슈퍼마켓등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바우처로 식생활비부담 완화
독일	Deutschlandticket	대중교통 정액권을 통한 반복적 교통비 부담 완화
일본	도쿄 주오구 생활응원 상품권	지역 내 소비를 전제로 장보기·외식비 부담 완화

출처: 서울특별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소개, 경기도(2025.07.18.)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고 사용하세요., 싱가포르 CDC Vouchers Scheme, 독일 연방정부 Deutschlandticket 공식 페이지, 일본 CHUO CITY

□ 부담의 지역성: 생활비는 「전국 평균」이 아니라 「우리 동네 가격」으로 체감

- 동일한 물가상승률 아래에서도 임차료·통근거리·구매처 접근성에 따라 부담 크기와 구성이 달라져, 전국 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부담 구조를 포착할 수 없음
 - 소비자물가지수는 전국 단위 총량 지표이지만 시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지역의 임차료 수준, 통근 거리와 교통비, 식료품 구매처의 접근성임. 동일한 물가상승률이라도 부담의 크기와 구성은 지역별로 달라짐
 - SRI 시민패널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부담 구조는 지역의 인구·주거·산업 구조에 따라 규정됨. 청년 임차가구 비중(월세 26.4%), 1인가구의 외식성 소비, 사업장과 주거가 결합된 자영업 가구의 비중은 모두 지역 특성 변수이며, 전국 단위 정책만으로는 포착되지 않음

□ 전달체계 근접성: 중앙정부의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생활밀착형 지출 지원

- 지방정부는 식·주·이동·돌봄 영역에서 지출 항목 자체를 줄이는 현물·서비스형 수단을 즉시 작동시킬 수 있음
 - 중앙정부는 통화·조세·사회보장 등 거시적 수단을 통해 물가와 소득 여건에 대응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특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성에 맞춘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음

- 반면 지방정부는 식(공공 급식·지역화폐 사용처), 주(공공임대·관리비·에너지), 이동(대중교통·요금 지원), 돌봄(보육·방과후·의료)이라는 생활영역에서 지출 항목 자체를 줄이는 현물·서비스형 수단을 직접 운용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즉시 체감됨
- 이는 현금 이전 중심의 재분배가 포착하지 못하는 「현물 사회이전」의 영역으로, 「소득분배 개선이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됨

□ 지역경제 순환: 생활비 부담은 곧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와 연계

- 재량 지출 축소가 소상공인 매출 감소→고용 축소→가계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형성하므로, 역내 소비를 전제한 생활비 지원이 가계 부담 완화와 상권 회복을 동시에 달성
 - 가계의 생활비 압박은 외식·문화·여가 등 재량 지출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고용 축소→가계소득 감소라는 순환을 형성
 - SRI 시민패널 조사에서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이 62.2%로 전 직업군 중 가장 높다는 점은, 소비 위축이 이미 공급자 측의 가계 부담으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줌
 - 지역화폐·사용처 지정형 지원과 같이 역내 소비를 전제로 한 생활비 지원은 가계 부담 완화와 지역 상권 매출 회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생활비 정책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정주와 사회통합: 청년에게 생활비는 「살 것인가」와 「만날 것인가」를 결정

- 생활비 부담은 청년의 정착 여부와 사회적 관계 유지에 직접 작용하므로, 저비용 만남이 가능한 공공 공간·문화 프로그램·생활SOC 공급이 지방정부의 고유 대응 수단
 - 청년층은 월평균 소득이 약 247.3만 원으로 가장 낮으면서도 식생활비·주거비 합산 지출 비중이 55.7%로 가장 높음. 생활비 부담은 청년의 거주지 선택과 정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지역의 인구 구조와 직결됨
 - 프렌드플레이션은 생활비 부담이 사회적 관계와 지역사회 참여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줌.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문화 프로그램·생활 SOC의 공급은 지방정부만이 지역 여건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대응 수단

해외 '생활비 정치' 사례 - 뉴욕 맘다니 시장

- 뉴욕 조란 맘다니 시장은 2025년 선거에서 '생활비 정치'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임대료 동결·무상 버스·무상 보육·공영 식료품점·최저임금 인상·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6대 공약을 내세움
- 특히, 약 100만 가구가 거주하는 임대료 안정화 주택의 임대료를 임기 4년간 동결하는 결정이 2026년 6월 임대료 지침 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에 상징적 전환점을 만들
- 다만, 무상 버스·무상 보육 등 재원 소요가 큰 공약은 증세·주정부 협조와 맞물려 정치적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어, 생활비 정책은 재정·거버넌스를 포함한 총체적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

출처: 이데일리뉴스(2025.11.5.), 생활비 안정·빈부격차 완화 내세운 맘다니 공약 통했다.

5. 요약 및 시사점

□ 불황형 지출 확대와 계층별 취약성

- 수원 시민은 “전체 가계경제는 전년과 비슷하다”고 응답했지만, 소득 변화 없음은 45.6%, 소비지출 증가는 58.7%로 나타나 가계 수지의 비대칭성이 심화
 - 이는 소비 여력 확대에 따른 ‘호황형 지출’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소득 정체 속에서 최소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불황형 지출 확대’임
 - 부담은 소득이 낮을수록 가팔라지며, 저소득층·청년층·전월세 임차가구에 더해 1인가구·자영업자에서도 식생활비·주거비·고정비 압박이 중첩된 취약 구조 확인

□ 시민 부담이 큰 식·주 영역으로 정책범위를 확장하고 세대별 부담구조를 함께 반영

- 수원시는 교통·교육·의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활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시장 직속 ‘생활비절감추진단’ 신설로 분산된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전담 추진체계를 마련함
 - 향후에는 개별 사업의 단순 확대보다 생활비절감추진단을 중심으로 사업별 대상·지원액·실제 절감액을 통합 관리하고, ‘생활비 부담 완화’라는 하나의 정책체계 아래 생애주기별 수혜 패키지로 묶어 안내할 필요

<수원시 3대 생활비(교통·교육·의료) 정책과 지원 대상>

구분		정책명	지원대상	연령
3대 생활비 절감 (민선9기 공약) [6개 정책]	교통	수원투어무상버스	평일 이용자 주말 이용자	전 연령 전 연령
	교육	새빛인강	신중년	40~64세
	의료	여성자궁경부암예방접종	여성	18~26세
		노인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노인	65세 이상
		청소년3대중독해소지원	초·중·고	9~18세
		백내장수술비	노인	65세 이상
새빛생활비 패키지 (‘26년 시행) [4개 정책]	교통	무상교통	사회 초년생 어르신	19~23세 70세이상
	교육	새빛인강	초·중·고 청년	8~18세 19~39세
	의료	생리용품지원	여성	11~18세
		대상포진 접종비	어르신	65세 이상
	교육	청개구리연못	초·중·고·학부모	전 연령
지속사업 [10개 정책]	교통	청소년 교통비 지원	어린이·청소년	6~18세
	교육	어린이 원어민화상영어	어린이(4~6학년)	11~13세
		초등학생 생존수영	어린이(3~4학년)	10~11세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소년·청년	13~39세
	의료	(노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어르신	65세 이상
		어린이 예방접종(BCG, B형간염 등19종)	어린이	12세이하
		어린이집·초등학생 예방접종(인플루엔자)	어린이	5~12세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청소년	14세
		어르신 예방접종(폐렴,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어르신	65세 이상

● 식생활비와 주거비는 시민 부담 1·2순위(44.0%, 24.5%)이자 정책 요구 1·2순위(42.3%, 19.8%)이지만 현재 3대 생활비 정책의 범위 밖에 있음

- 추가 희망 정책 1위가 「수원페이 인센티브·충전한도·사용처·예산 확대」라는 점을 고려해, 싱가포르 CDC Vouchers처럼 수원페이의 식료품·생필품·공공요금 결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생활비 절감 정책'을 식·주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 전면적 물가 안정 논의보다 생활영역별 접근이 효과적이며, 지원 수단의 사용처·품목을 시민 부담이 가장 큰 영역에 우선 조정해 「가장 많이 쓰는 곳」과 「가장 줄이고 싶은 곳」이 일치하도록 설계할 필요

해외 '생활비 정치' 사례 - 싱가포르 CDC Vouchers를 통한 사용처 집중형 디지털 바우처

- 싱가포르는 2020년부터 전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800싱가포르달러 규모의 CDC Vouchers를 디지털 방식으로 지급
- 국민 인증 시스템(Singpass)으로 손쉽게 신청·수령 할 수 있고, 사용처를 전통시장 상인·호커센터·슈퍼마켓 등으로 제한해 식생활비 절감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 그 결과 바우처 수령률과 사용률이 모두 96~97%를 웃도는 높은 정책 도달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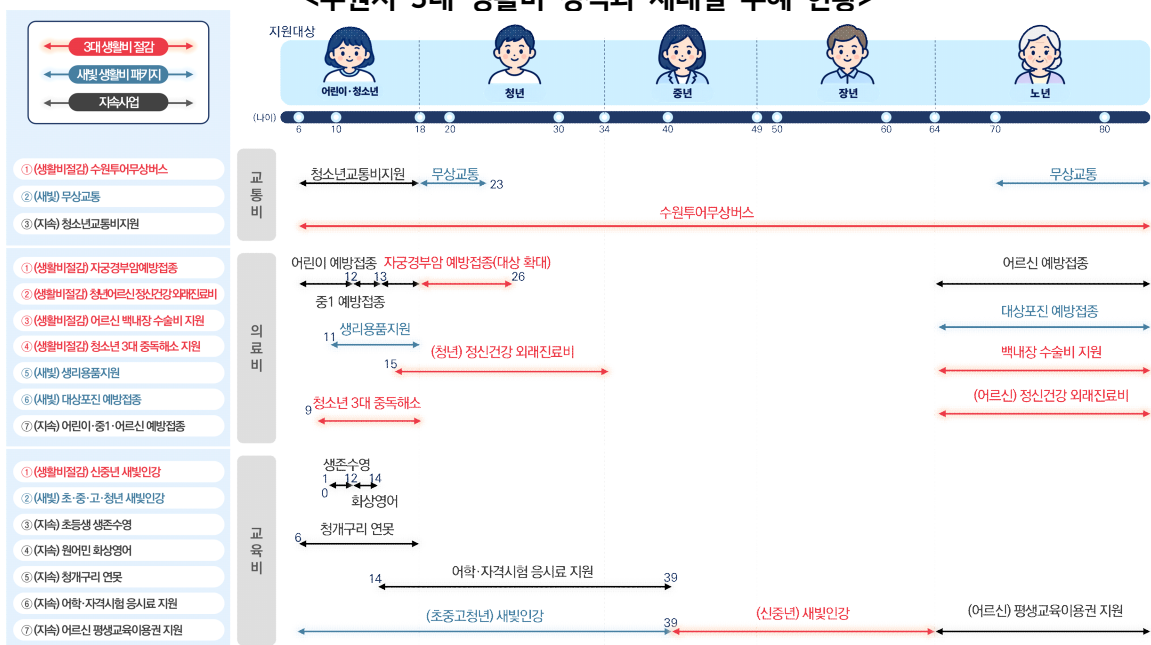
출처: <https://vouchers.cdc.gov.sg/residents/info/>

□ 세대별 '지원 건수'보다 실제 부담과 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 균형 재설계

● 현재 수원시의 3대 생활비 정책은 중·장년층의 직접 수혜사업이 제한적임. 다만, 단순한 사업 수보다 세대별 실제 부담 항목과 지원 후 절감 효과를 기준으로 정책의 균형 점검 필요

- 청년: 기존 교통비 지원과 함께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비·식비 부담을 낮추는 '주거·생활 통합 지원' 강화
- 중년: 자녀 교육비 부담과 정책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고려해, 교육비 절감뿐 아니라 자녀 교육·돌봄을 연계한 생활비 지원 강화
- 장년: 은퇴 전후 소득 변화와 금융비용 부담을 고려한 지원 방안 검토
- 노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필수 의료지출의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약제비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

<수원시 3대 생활비 정책과 세대별 수혜 현황>



□ 1인가구·자영업자 등 생활비 취약집단을 고려한 타깃형 지원 강화

● 생애주기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가구형태·경제활동 특성에 따른 생활비 부담에 별도 대응

-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규모는 다인가구보다 작지만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은 57.4%로 더 높고, 식생활비를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꼽은 비율도 55.9%에 달함.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어려운 1인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소포장 식료품·공동구매 등 식생활비 절감형 지원 검토
- **자영업자·소상공인**: 월평균 생활비가 333.8만 원, 소득 대비 생활비 비율이 62.2%로 높게 나타나 가계 생활비와 사업 운영비 부담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음. 가계 지원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해 사업장 고정비와 가계 생활비 부담을 함께 낮추는 방안 검토
- 향후 생활비절감추진단은 '생애주기별 지원'과 '생활비 취약집단 지원'을 이원화해 관리하고, 수혜자 수분 아니라 1인당 지원액·실제 절감액·미충족 수요 등을 기준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생활비절감추진단을 중심으로 환류체계와 재정지속가능성을 함께 관리

● 생활비 부담 완화의 인지도(71.1%)와 체감 기대(55.6%)의 격차를 좁히려면, 생활비절감추진단이 부서별 사업을 총괄하면서 실제 절감액과 수혜 사각지대를 점검하는 환류체계와 지속가능한 자원·거버넌스 설계를 병행할 필요

- **디지털 환류(Feedback) 시스템 구축**: 수원페이 및 새빛톡톡 앱 내에 가시적인 디지털 장치(예: '이번 달 절감액 안내')를 구현하여 정책 효능감 즉각 제공
- **전달 경로별 맞춤 안내**: 민생 정보 획득 경로는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새빛톡톡 28.0%)과 SNS(22.8%)가 중심인 만큼,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계층별 안내를 강화하되,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저소득 층에는 행정복지센터·우편 안내 병행
 - 사각지대 해소: 13.8%는 '따로 정보를 찾지 않는다'고 응답한 만큼, 신청주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찾아가는 안내·자동 연계 방식 함께 고려
- **지속가능한 자원 설계**: 뉴욕 사례가 보여주듯 생활비 정책의 확대는 자원 조달과 거버넌스 리스크를 동반함. 수원시 역시 사용자·대상을 핵심 지출 축에 집중해 정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득연동형 차등 인센티브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총체적 설계 필요

SRI 시민패널조사 개요(2026년 2/4분기)

- ✓ 조사목적: 시정 현안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구축, 시민들의 시정 현안 인식과 변화 파악
- ✓ 조사대상: 수원시정연구원 패널 3,669명(유효표본 859명)
- ✓ 조사방법: 온라인조사
- ✓ 조사시기: 2026.06.24.~06.26(3일간)
- ✓ 조사내용: 민선9기 기대감, 민생경제 인식 및 생활비 부담정도

SRI Brief | 발간목록

호수	집필자	제목	발간일자
제119호	변미리, 박민진 등	(도시정책지표연구) 수원시민의 웰빙과 공동체 역량	2026.01.06.
제120호	민보경, 박민진	(도시정책지표연구) 인구이동을 통해 본 수원의 인구 특성	2026.01.15.
제121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 3대 가을 축제 외국인 참여 특성과 시사점	2026.01.20.
제122호	박민진 등	(도시정책지표연구) 수원과 서울의 도시정책지표 비교와 함의	2026.01.27.
제123호	양은순, 박민진 등	쑤저우에서 시작된 도시혁신: 장신성(章新勝) 리더십과 중-싱 협력의 확산	2026.02.03.
제124호	박민진, 장정식	수원 3대 가을 축제 온라인 반응 및 글로벌 홍보 전략 제안	2026.02.10.
제125호	박민진, 박영미 등	SRI 시민패널 기반 축제 참여행태 분석	2026.02.19.
제126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시민의 생활체감과 2026년 경기 전망	2026.02.24.
제127호	정재진	수원 중고차 산업 효과 분석과 특화 발전 방안	2026.03.03.
제128호	박민진, 박영미 등	행복 수준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의 삶의 격차	2026.03.10.
제129호	김도훈, 이지원 등	다목적 모빌리티를 통한 '수원형 N분 도시' 실현 전략	2026.04.14.
제130호	박민진, 박영미 등	수원 X세대 심층분석	2026.04.21.
제131호	박민진, 채우리 등	수원시 1인가구의 현주소 : 다인가구와 다르고, 세대마다 또 다르다	2026.05.04.
제132호	최도인, 박민진 등	로컬이 글로벌이 되는 방정식:K-컬처 시대 수원 3대 가을 축제의 세계화 전략	2026.05.12.
제133호	김유빈, 최석환 등	글로벌 반도체 산업 동향과 수원형 중립형 R&D허브 구축 방향	2026.05.19.
제134호	정다래	마곡 R&D클러스터의 선도기업 유치 전략과 수원시 적용 방향	2026.05.26.
제135호	박민진, 박영미	두 개의 봉우리, 두 개의 과제: 수원시 인구 구조로 본 일자리 정책 고도화 방향	2026.06.09.
제136호	김진언	수원시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가격 전망	2026.06.16.
제137호	강은하, 오미현 등	폭염 대응의 전환점: “재난 관리”에서 “열 회복력 도시”로	2026.06.23.
제138호	양은순, 임채실	2026년 하반기 경제 전망	2026.07.6.
제139호	정란수, 신한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쟁점과 정책제언	2026.07.14.
제140호	박진우, 최석환 등	균형발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수도권 정책제언	2026.07.20.
제141호	허경재	주거실태조사 20년, 수원시 현황과 과제	2026.07.28.
제142호	김도훈	수원시 생활권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026.08.04.
제143호	박진우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의 쟁점과 정책 시사점	2026.08.11.
제144호	안희자, 신한나	수원 로컬관광 가이드투어 활성화 방안	2026.08.18.
제145호	정재진	재정분권 30년, 지방재정은 얼마나 나아졌나?	2026.08.25.
제146호	정재진	OECD 국가와 비교해 본 재정분권 수준과 시사점	2026.09.01.
제147호	정재진	“재정분권”, 앞으로의 원칙과 방향은?	2026.09.08.
제148호	황소하	수원새빛돌봄, 누가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였을까?	2026.09.15.
제149호	김은영	수원수목원 운영 개선방안	2026.09.22.
제150호	박민진, 박영미	시민이 찾은 수원의 매력과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추진 과제	2026.10.02.
제151호	박민진, 박영미 등	인구·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지역 골목상권 소비 회복 전략	2026.10.13.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